

發電所建設計劃 一部를 調整

一部 發電所 竣工時期 1~2年 延期

92년 최대전력수요가 전망치보다 다소 낮아졌고 또한 막대한 전원개발투자로 인한 재원조달의 어려움 등을 경감하기 위하여 91년 10월에 수립한 장기전력수급계획 중 92년 착수예정인 일부 발전소의 준공시기를 1~2년씩 연기하기로 하였다.

〈한국전력공사 전원계획처 제공〉

92년 최대전력수요 증가율이 8.9%(장기계획 전망치)에서 6.9%로 둔화되는 등 경제여건이 변화되고 있으며 매년 막대한 규모의 발전설비 확보를 위한 전원개발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부족자금의 규모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전력공급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한 설비투자를 최소화하고자 작년 12월 24일 장기전력수급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91년 10월 수립한 장기전력수급계획 중 92년 착수예정

〈표 1〉 1992년 최대수요증가 실적

구 분	전 망	실 적	차 이
최대수요 (MW)	20,834	20,238	△ 396
증 가 율 (%)	8.9	6.9	△ 2.0

(주) 강력한 소비절약시책 추진 및 기상 요인 등도 낮은 성장을 시현에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인 일부 발전소의 건설계획을 조정하였다.

조정내용

전력수요는 현 장기계획의 전망치를 사용하였고 설비예비율은 현 계획치보다 1~3% 정도 하향조정하여 2000년경 18~19%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며 국내 무연탄산

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부 무연탄 사용 발전소의 폐지시기를 연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장기전력수급계획은 매 2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전기사업법 제3조에 의거 93년중 제반 여건변동을 세밀히 검토하여 수정, 보완할 예정이나 이에 앞서 단기적인 조치로서 조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삼천포화력 5, 6호기의 준공시기를 당초 95년 및 96년에서 97년과 98년으로 2년씩 연기하고, 하동화력 1, 2호기를 당초 96년, 97년에서 97년, 98년으로 준공시기를 1년씩 늦추는 한편 초기 건설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신규원자력 1, 2호기도 1년씩 연기하도록 조치하였다.

삼천포, 하동화력 건설공기 조정에 따라 90년대 중반의 전력예비율을 보완하기 위하여 투자비 소요가 비교적 적은 LNG 복합화력 30만 kW급을 일산복합화력 잔여부지에 건설하고 부산화력 설비보강 추진으로 전력수급안정을 이를 수 있도록 대처하였다.

〈표 2〉 건설공기 조정 발전소

발 전 소 명	현 계 획	조 정	비 고
삼천포화력 #5, 6 (560천kW×2)	95, 96	97, 98 (500천kW×2)	인니 파시르탄(저유황탄) 사용
하동화력 #1, 2 (500천kW×2)	96, 97	97, 98	어업권보상 관련 문제해 소에 시간 소요
신규원자력 #1, 2 (1,000천kW×2)	2000, 2001	2001, 2002	건설기본계획 수립시기 조정(92→93)
신규 LNG 복합화력 (300천kW×1)	—	95	삼천포 및 하동화력 준공 시기 조정에 따라 낮아지 는 예비율 보완
부산화력 #1, 2 설비보강 (300천kW×1)	—	96	—

또한 국내 유일의 부존 에너지원인 무연탄 사용을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영동 및 영월화력 등 의 폐지시기를 조정하여 일단 4~5년 이상 연장토록 하는 한편,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비한 설비보강 작업을 병행 추진키로 하였다.

이와 같이 건설공기를 조정함으로써 전력예비율이 다소 하향조정되었으며 2001년까지 약 2조원의 투자비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91 장기전력수급계획 수립후 92년 최대수요 증가율 둔화와 그동안의 국내외의 여건변동, 투자재원 조달의 어려움 등을 경감하기 위하여 일부 발전소의 건설계획이 92년 12월 정부 심의를 거쳐 조정되었

다. 이는 전원개발여건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완작업의 일환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한편, 93년 장기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해 금년 상반기중 본격적인 검토작업이 이루어질 예정인 바, 향후 전력수요의 재예측, 환경규제 강화, 입지, 재무여건을 감안한 적정 전원구성비의 재검토, 장기적인 적정 설비확보규모 수준(공급신뢰도, 예비율)의 재검토 보완, 단위기 격상용량 도입시기, 석탄신기술 개발과 연계한 검토 등 제반 사항을 다각적으로 고려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금년 하반기중 확정될 예정이다.■

갔다.

이 委員會는 현재 日本 원자력정책의 기본지침인 「원자력개발이용 장기계획」의 재검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프랑스로부터 반송하여 들여오는 플루토늄의 해상수송에 대한 국내외의 예상 밖의 강력한 비판에 위원들 사이에서는 낭패와 망설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고속증식로는 연료로 사용한 플루토늄보다 많은 플루토늄이 회수된다. 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연료에서 플루토늄을 회수하여, 고속증식로에서 다시 이용하는 원자연료 사이클을 확립하면 우라늄자원을 60배 정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다. 원자연료사이클의 실현은 석유의존의 체질에서 탈피할 수 있는 日本 에너지정책의 기둥인 것이다.

그러나 급격한 국제정세의 변화가 기반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다. 옛 소련의 핵무기 해체로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남아돌아 원자력 개발의 경제성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상황을 맞이한 것이다. 특히 플루토늄은 무기용으로서 테러리스트집단에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게 됐다.

한편, 고속증식로 개발에서 앞서 가고 있던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고속증식로의 경제성과 원전반대운동 그리고 기술상의 문제들에 봉착하여 잇달아 계획의 중지 내지 수정을 결정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고속증식로의 개발에 가장 열을 올리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日本 뿐인 것이다.

國際管理構想도 擡頭

흔들리는 日本 플루토늄政策

日本 원자력정책의 진로가 흔들리고 있다. 우라늄자원의 유효한 활용을 내걸고 플루토늄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던 일본이지만, 다른 외국으로부터는 「필요 이상으로 플루토늄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비판이 속출, 국제적인 고립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美露 양 대국의 핵군축과 그에 따른 핵물질의 과잉 등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한 日本 정부의 현실인식이 너무나도 안이했던 것에도 원인이 있다. 따라서 日本 국내에서는 日本이 냉엄한 국제여론을 각오하면서까지 종래의

플루토늄 이용노선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외의 정세변화를 배려하여 노선의 재검토를 추진할 것인가에 관심이 높다.

批判에 대한 망설임

『왜 日本의 플루토늄 이용정책에 불안의 소리가 높은가? 日本에 대한 신용이 없어서인가?』

『군사이용과 평화이용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92년 12월 중순에 개최된 日本原子力委員會(위원장 科技廳長官)의 專門部會에서 이러한 의논이 오고